



주간 통일정세

2013-2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일심단결 위력으로 '전승절' 경축하자"(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승절'(정전협정일·7월 27일) 60주년을 "승리자의 축전으로 빛내자"고 독려하며 일심단결을 강조함.
 - 신문은 사실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는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신뢰하며 따르는 일심단결의 승리"라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올해 7·27을 선군 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과시하는 역사적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독려함.

- **北 김정은, 軍 후방총국 산하 버섯공장 시찰(7/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534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에 새로 건설된 버섯공장을 현지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곳을 시범으로 군대와 사회에서 버섯공장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며 "이런 버섯공장을 나라의 곳곳에 건설해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시함.

- **北 김정은,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7/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새로 건설하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은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정당성을 시위하고 당의 보건정책을 옹호하고 빛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건성과 해당부문 간부들이 건설현장에 자주 나와 의료 설비와 비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병원 운영 및 관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함.

- **北, 김정은 원수칭호 수여 1주년 맞아 '지도력' 부각(7/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 전면에 김 제1위원장이 군 수뇌부와 함께 있는 사진과 '위대한 백두영장을 높이 모신 선군 조선은 끝없이 강성변영할 것 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함.
 - 신문은 김정은 원수 칭호 수여를 "특기할 민족사적 대경사"라며 "영도자의 위대성은 사업 연한(기간)이나 직위가 아니라 영도적 자질과 조국과 인민 앞에 이룩한 업적으로 과시된다"고 강조함.



- **北 조선중앙통신 사장에 김창광 임명(7/18,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의 신입 사장에 김창광 제1부사장이 승진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북 중인 아비아긴 바따르호야그 몽골 문짜메통신사 사장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하며 이 자리에 배석한 김창광을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인터뷰 100만 달러 요구설'은 "모략 보도"(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전협정 60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를 "모략"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반박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조선일보를 지목하고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들면서 전승 60돌을 계기로 서방언론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느니, 그 대가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느니 뭐니 하는 허황하기 그지없는 모략보도를 붙여댔다"고 비난함.

- **北 김정일인민보안대학에 김정일 동상 설치(7/19,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경찰대학과 비슷한 북한 김정일인민보안대학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이날 열린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김창일 김정일인민보안대학 학장 등이 참석함.
 -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제막사에서 "장군님(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는 제도의 안전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보위해 나가는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담보가 됐다"고 칭송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北, 김일성·김정일에 정전 60년 기념훈장 수여(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 60주년(정전협정 체결·7월 27일)을 기념하는 훈장을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일 훈장 수여에 관한 정령을 발표했으며 김 주석에 대해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김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확립해 조국수호와 반제 반미투쟁의 '보검'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 **北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에 한광상 승진 임명(7/21, 연합뉴스)**

 - 북한의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에 한광상 당 제1부부장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부상한 한광상 재정경리부 제1 부부장이 작년 5월께 재정경리부장으로 승진한 것 같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여동생은 '국방위 과장'...향후 역할 주목(7/21,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6)이 현재 최고 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의 행사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김여정은 작년 초부터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공식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며 "그는 김정은의 의견을 관장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창선 국방위 서기실장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함.

● 北, 정전 기념일 1주일 앞두고 본격 분위기 띄우기(7/2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1면을 통틀어 '조국해방전쟁(6·25전쟁) 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이라며 전승절 기념곡 4곡의 악보와 가사를 게재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방송되는 TV 채널인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의 악단인 모란봉악단 등이 연주한 전승절 기념곡 4곡을 반복해서 내보내며 전승절 분위기를 고조함.

■ 김정은동향

- 7/1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116호 농장에 건설한 버섯공장 현지지도(7.16,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전창복,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마원춘 동행

- 7/16, 김정은 黨 제1비서, 7.16 새로 건설 중인 아동병원과 구강병원 건설장 현지지도(7.16,중통·중방·평방)

· 박봉주·리재일·마원춘·허환철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 내각 총리, 아동병원·구강병원 건설장 및 국가과학원 버섯 연구소와 문수물놀이장 현지 요해(7.19, 중통·중·평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7.10字) 제3245·3246호, 김일성·김정일에게 "조국해방전쟁승리(7.27, 정전협정 체결) 60돌 기념훈장" 수여(7.20, 중방·중통·평방)
 - 지난 50년간 세계 5대륙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을 "국제적 연대성운동(백두산 장군들에게 6,300여건 편지·축전 등 전달, 190여개 나라에서 1만 5,000여건 성명·호소문 등 발표, 2만 여회 연대성 행사 등)으로 지지 성원" 주장(7.20, 중통)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협동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은률군 장련협동농장·관해협동농장의 농업실태 현지요해(7.21, 중통·평방)

나. 경제

● 김정은, 독일 맥주집 유치하려다 '퇴짜'(7/19, 빌트)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에 양조장을 갖춘 야외 맥주집 '비어가르텐'을 열어달라고 독일 맥주회사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독일 일간지 빌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독일 맥주회사인 파울라너(Paulaner)는 이 신문에 이미 12곳에 새로 비어가르텐을 낼 계획이어서 수용 능력이 찼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함.

다. 군사

● 北, '전승절 앞두고 '판문점도끼만행사건' 다시 부각(7/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7시 30분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당시 미군을 살해한 북한군 군인을 칭송하는 내용의 '도끼사건의 주인공으로 영생하는 전사, 공화국영웅 홍성문'이란 제목의 영상물을 방영함.
- 당시 북한 간부들은 미국이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파견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북한 경비병들을 표창할 생각을 못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 후계자 신분으로 "우리 경비병들의 행동은 자위적인 행동이고 자랑할만한 영웅적 행동이었다"라고 치하하며 이들을 높이 표창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중앙TV가 전함.

● 北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임명 확인(7/18, 연합뉴스; 평양방송)

- 북한의 김정각 전 인민무력부장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평양방송은 18일 평양의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전승업적에 관한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해 토론했다고 전함.



- 北 TV, 1960년대 쿠바와 우호관계 부각...왜(7/19,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TV가 1960년대 북한과 쿠바의 '혈맹' 관계를 부각하는 영상물을 새삼스레 내보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조선중앙TV는 18일 오후 7시 30분께 1960년대 쿠바 주재 북한 대사를 지냈던 장정환의 일대기를 다룬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어란 제목의 영상물을 방영함.
 - 중앙TV는 영상을 통해 1960년대 중반 쿠바의 정세가 매우 긴장했다며 당시 김일성 주석이 쿠바를 도우려고 여러 가지 지원조치를 취했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국제학술지에 투고해야"...각 분야 국제화 강조(7/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9일 김일성종합대가 교육의 질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놓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를 깊이 파악한 데 기초해 교과서, 참고서를 새로 집필하는 사업,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과목들을 개척하는 사업 등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대학교원들이 국제학술잡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 적극 참가하는 사업에 힘쓰는 한편 다른 나라 과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15~16일 폭우 예보..."피해대책 세워야"(7/1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5일 '기상경보'로 이날 밤부터 16일 밤까지 양강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100~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부분적으로 3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겠다고 예보함.
 - 방송은 "농촌경리와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센 바람과 비락, 큰물(홍수)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밝힘.
- 北 '애국미 헌납' 모범사례 대대적 선전(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충정의 애국미를'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각지의 수많은 당원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나라에 바치고 있다며 "(지난 해) 농사를 잘 지은 남포시 학천농장 농민들은 김제원 농민의 넋을 이어갈 결심 밑에 10t 800여kg의 알곡을 애국미로 기증했다"고 밝힘.
- 北, 최고 300mm 호우 경보...임진강 등 홍수 우려(7/1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전 9시 14분 발표한 '장마철 통보'에서 "오늘 서해안 지방과 자강도·함경남도·강원도 지방에서 100~200mm의 비



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안북도 태천·운산 등 청천강유역과 성천·양덕·북창·맹산 등 평안남도의 내륙지방, 금천·신평·곡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내륙지방에서는 3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함.

- **북한 비 피해 늘어..."13~15일 사망 4명·실종 1명"(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러 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13일 18시부터 15일 18시 사이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180여 채의 살림집(주택)이 파괴·침수됐고 황해북도에서는 820여 정보의 논과 밭이 침수 또는 매몰됐다고 밝힘.
- **北도 온난화..."최근 5년 기온, 평년보다 0.3도 높아"(7/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기상수문국을 인용, 북한은 근년에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졌으며 태풍, 폭우,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많았다고 전함.
 - 통신은 "지난 5년간 조선의 연평균 기온은 8.5도로 평년에 비해 0.3도 높아졌다"며 지난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0년에 평균 0.074도씩 올라갔지만 북한의 경우 0.2도씩 상승했다고 설명하면서 2017년에는 북한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0.5도 높아져 9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폭우에 의한 큰물(홍수)과 태풍, 해일 등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의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힘.
- **北, 외래어 배경 강조..."평양표준어 쓰자"(7/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우리의 언어생활과 평양문화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인간의 건전한 낯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의 한 고리가 민족어 말살책동"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의 문화어를 저들의 언어찌꺼기로 이질화시켜 보려는 적들의 책동은 결코 통할 수 없다"며 "표준문화어, 평양말을 쓰는 것이 우리의 문화생활 원칙"이라고 강조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중국 단둥서 북한 어민 4명 잇따라 구조(7/15, 신화망)**
 -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동강(東港) 앞바다에서 최근 북한 어민 4명이 잇따라 구조됐다고 신화망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단둥 변방지대(국경수비대)는 14일 새벽 동강 앞바다에



서 소형 목재 어선에 탄 북한 어민 2명이 손전등으로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중국 어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으며, 변방지대는 이들 북한 어민이 지난 12일 오후 모선(母船)에서 떨어져 나와 고기잡이를 하던 중 짙은 안개에 방향을 잃고 이틀간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美농구단, 北 무리한 요구로 재방북 취소(7/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농구단이 올해 재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방북을 취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전직 프로선수 출신 미국인 코치들의 봉사단체인 '국제감독단'을 꾸려 작년 6월 방북했던 루크 엘리 대표는 이 방송에 "올 6월 평양에서 농구 교실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방북 계획을 취소했다"며 "북한 당국이 체육관 사용료와 친선 경기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의 일당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힘.
- **北 주도 국제 태권도대회에 美 선수단 참가(7/16, 자유아시아방송(VOA))**
 - 이달 17~21일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주최 '제18회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 4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이뤄진 미국 선수단이 지난 13일 출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함.
- **일본 납치담당상, 26일 베트남 방문...대북포위망 구축(7/16, 산케이신문)**
 -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 담당상이 베트남의 정부 요인과 공안 담당 간부를 만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26일 베트남을 방문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함.
- **중국 매체 "대북무역상들, 미수금 증가에 고통"(7/16, 환구시보)**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북·중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발 기사에서 북한에 물품을 판매한 조선족 등 중국 무역상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평양에 가서 몇 달씩 머물며 빚 독촉을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단둥의 한 무역회사 관계자는 "북한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20여개 상사와 거래했는데 관계가 좋아 외상으로 물건을 주기 시작한 게 최근이 됐다"면서 "북한 무역회사들은 '지도자가 바뀌었다거나' 값을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아예 회사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파나마 미사일부품 선적 의심 北선박 적발...선원 구금(7/16, 연합뉴스)**
 - 리카르도 마르티넬리(61) 파나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출발한 북한 국적



선박이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밀반입하려고 했다"고 이날 '라디오 파나마'와 'RPC 라디오'를 통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문제의 선박에 미약이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구로 인도, 조사하는 도중 "설탕이 실려 있는 것을 걷어내자 밑에 있던 컨테이너 2개에서 정교한 미사일 장치로 보이는 화물이 발견됐다"며 "이런 물품은 (파나마 운하로의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美 리처드슨 전 주지사, 北 장일훈 차석대사 면담(7/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내 대표적 친북 인사로 알려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지난주 뉴욕에서 최근 부임한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만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리처드슨 전 주지사 측은 장 차석대사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정기적으로 북한에서 온 관리들은 만나고 있으며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미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전함.

● **국제사회, 제재와 별도로 대북 인도적 지원 이어가(7/17,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계획(유니세프)은 올해 북한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 예산 107만 달러(약 12억원)를 책정해 14개 학교·유치원의 설비를 보수하고 어린이 3만5천명에게 교재와 학습도구를 지원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덴마크 구호단체인 '미션 이스트'도 작년 여름부터 황해남도 해주에 있는 고아원 3곳의 어린이 750여명에게 영양보조식품과 콩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이후 발육 부진 어린이가 줄어들고 종종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사라졌다고 밝힘.

● **중국, 대북교역·경협 둔화 지속(7/17, 환구시보)**

-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중국 대북무역총액의 80%를 차지하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1~4월 단둥의 대북수출총액이 2억8천만달러(약 3천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했다고 전함.
- 단둥의 무역 담당자는 "중국의 대북수출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중국의 대외수출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해는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함.

● **北, 파나마에 '억류 선박' 즉시 출항조치 요구(7/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아버나항을 출항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운반이라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 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파나마 수사 당국은 마약 수사라는 미명 하에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난폭하게 공격하여 구류한 다음 배침을 강제로 수색하였으나 그 어떤 마약도 발견하지 못하자 다른 짐을 걸고 들면서 저들의 폭거를 비호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선박에서 발견된 미사일 부품 등과 관련해 "그들이 걸고 드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설명함.
- 유엔, 북한에 600만 달러 긴급구호 지원 결정(7/18, 미국의소리(VOA))
 - 유엔이 북한에 긴급 구호자금 600만 달러(약 67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해 18일 전함.
 - OCHA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재 유엔 기구들은 북한 내 유엔 상주 조정자인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과 협의해 600만 달러 예산에 맞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결정할 계획임.
 - 상반기 中 방문 북한 주민 10만 명...작년보다 12% 증가(7/18, 미국의소리(VOA))
 - 중국 국가여유국이 17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9만9천1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만8천800명)보다 12%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이번 통계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을 계한 것으로, 탈북 등 비공식 경로로 중국에 들어온 사람까지 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북한, 중국서 송충이 방제·식용화 기술 전수(7/18, 화합승덕망)
 - 중국 허베이(河北)성 지역 인터넷 매체인 화합승덕망(和合承德網)에 따르면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삼림병충해관리국 최중호 국장 일행이 최근 허베이성 평취안(平泉)현을 방문해 북한이 송충이로 인한 삼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송충이 번데기 채취와 식용화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다고 밝힘.
 - 유엔, 미사일 부품 선적 북한선박 긴급 현장조사(7/18, 연합뉴스)
 - 유엔의 한 소식통이 18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을



빛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소식통은 "이번 현장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의 얘기가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조사단은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모두 8개국에서 파견한 8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도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임.

● 중국 옌지-평양 관광 전세기 21일 운항 재개(7/19, 연변일보)

- 중국 지린성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21일 운항을 재개한다고 연변일보가 19일 보도함.
- 지난해 7월 정식 개통해 10월까지 3개월가량 운항한 옌지~평양 전세기 노선은 올해부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일시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 시기가 미뤄져왔음.

● 北, '반미투쟁 역사' 선전...평화체제 필요성 강조(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푸에블로호 사건, 미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정찰헬기 격추 사건 등의 '반미투쟁의 역사'를 언급하며 "전후 60년 동안 벌어진 반미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역사가 빛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 北 홍수피해 속출...국제적십자사 실사단 파견(7/1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며칠째 계속되는 폭우로 강원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황해북도 토산군 북포리라고 밝힘.
- IFRC는 북포리의 피해 규모와 지원 필요량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3일 현지에 긴급 실사단을 파견했으며 현재까지 90가구가 집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 북·러 공동선언 13주년... "친선협력 강화해야" (7/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추동한 역사적 계기'라는 제목의 '기념논설'에서 북·러 공동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변"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회의 10월 몽골 개최(7/19, 유비 포스트(UB POST))**
 - 올해 10월 29~31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회의가 열린다고 몽골의 영자신문 '유비 포스트'(UB POST)가 19일 전함.
 - GTI는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이며 올해 회의는 GTI 프로그램의 법적 위상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고 GTI가 그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평가할 것이라고 '유비 포스트'는 설명함.

- **北-러시아 아르츨시 스포츠·문화교류 확대(7/20, 자유아시아방송(RFA); 프리마미디어통신)**
 - 북한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 아르츨시가 스포츠와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프리마미디어통신을 인용해 20일 전함.
 - 프리마미디어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노비코프 아르츨 시장은 지난주 립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를 만나 북러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스포츠와 문화, 예술 교류의 확대를 제안함.

- **北 '전승절' 행사에 BBC 등 외국언론 참석(7/21, 러시아의 소리)**
 -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60주년 기념행사에 해외 주요 언론사를 비롯한 외국 사절단과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러시아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러시아의 소리'가 21일 보도함.
 - 러시아의 소리는 이달 22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아리랑'의 새로운 공연이 선을 보인다면 이번 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 주요 언론을 포함한 해외 언론사들이 참석한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美 의회조사국(CRS) 보고서(北 미사일 위협에 亞-太 지역 동맹국들의 탄도미사일방어 구축 협조) 관련 "저들의 군비증강을 합법화하며, 잠재적 적수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음흉한 전략적 기도"라고 주장(7.16,중통)
- [北외무성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7.17)]파나마정부에 억류된 '청천강'호와 선원들 관련 "겉고드는 짐은 합법적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쿠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며 '억류된 선원들과 배의 출항' 요구(7.18,중통)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에 정책전환 촉구... "대결상태 끝내야" (7/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대결상태 해소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불신하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정책전환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지난 6월 남북당국회담이 남측이 제기한 '격' 문제로 결렬된 데 이어 제2차 실무회담도 남한의 성의없는 태도로 성과가 없었다며 "남조선 당국의 대결정책은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긴장을 격화시킨 요인"이라고 비난함.

- **北 "국정원 개혁은 유치한 기만극... 해체해야" (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정보원 개혁은 유치한 기만극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 정보원의 대신 개입과 수뇌상봉 담화록 공개로 수세에 몰린 남조선 당국이 민심 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체개혁을 주문한 것은 "기소된 범죄자에게 죄를 따지는 대신 장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합법화할 방도를 미리 모색해 두라는 것이나 같은 소리"라며 "나아가 그를 비호하고 범죄자와 한 짝이 돼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함.

- **北방송,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 비난 (7/19, 평양방송)**
 - 북한은 19일 우리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을 통해 비난함.
 - 방송은 "괴뢰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더 연기함으로써 미제의 남조선 영구강점에 구실을 마련해주고 미제와의 군사적 공조를 더 강화하여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8월 한미군사훈련 하면 한반도정세 또 파국" (7/21,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다음 달 한미 합동 을지프리트엄 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와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오는 8월 미국은 또다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 하고 있다"며 UFG가 진행되면 한반도 정세가 파국적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위협함.



- **北, 개성회담 南태도 비난…"문제해결에 난관 조성"(7/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날 개성공단에서 열린 회담 소식을 보도하며 "남측은 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책임과 일방적인 재발방지 담보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주장함.
 - 통신에 따르면, 남측은 말로는 개성공단 정상화하자면서도 합의서 초안조차 준비해오지 않았으며 "회담을 공존시키면서 회수나 채워 회담을 한다는 형식만 차리려고 하였다"고 지적함.
 -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중단사태' 재발방지 ▲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기업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 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신변안전 및 투자재산보호, ▲통행·통신·통관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협력지구로 발전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을 했다고 주장함.

- **北매체, 女축구 남북대결 승리 신속 보도(7/21, 조선중앙통신; 평양방송;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1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선수권대회(동아시안컵) 여자부 1차전에서 북한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을 꺾고 승리한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함.
 - 통신은 경기가 종료되고 불과 1시간도 안 된 이날 오후 8시 55분 '조선팀, 남조선팀을 2:1로 타승'이라는 제목으로 승리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도 잇따라 승전보를 전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3차 남북 당국실무회담', 7.15 개성공단에서 진행 및 '제4차 남북 당국실무회담', 7.17 개성공단에서 개최 예정 보도(7.15, 중통)
- 北,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수적 문제'라며 '남북 대결상태 해소'와 '민족의 대단결' 강조(7.15, 중통·노동신문)
-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거론하며 "민심기만과 정치교란을 집요하게 일삼는 정보원패거리들"이라며 '국정원 해체투쟁' 지속 선동(7.15, 중통·중방·노동신문)
- 韓-美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협의(7.2, 워싱턴) 결과에 대해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도적 전횡(분담금 50% 인상 요구)과 괴뢰들의 추악한 사대매국적 근성을 드러내 보였다"고 시비 및 '미군 철수' 선동(7.16, 중통·민주조선)
- [중통 논평]朴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지시에 대해 "민심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국정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7.18,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윤병세, 주한외교단에 북핵 공조 중요성 강조>(7/15,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5일 주한 외교단과 취임 후 첫 오찬 행사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성김 주한 미국대사,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 벵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등 80여개국 대사들이 참석했음.
 -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와 관련,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북한의 대화 제의는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북한은 단순히 (군축대화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구를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윤 장관은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사전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과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에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는데 있어 전례없는 수준의 단결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음.
 - 또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변화 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美, 당분간 '6자회담 특사' 임명 안해>(7/19,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내부 인사로 공식이 된 북핵 '6자회담 특사'를 당분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대신 국무부에서 남북한을 모두 담당하는 로버트 랩슨 한국과장이 6자회담 특사직을 한동안 대행할 것으로 전해졌음.
 - 정부 고위소식통은 19일 "랩슨 과장이 현재 6자회담 차석대표인 회담 특사 대행직을 맡고 있다"면서 "22일 열릴 한·미·중 전략대화에도 랩슨 과장이 미국측 정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2011년 6월부터 6자회담 특사직을 맡아왔던 클리포드 하트 특사는 홍콩 총영사로 내정돼 지난달 자리를 떠났음.
 - 미국이 6자회담 특사를 당분간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의증을 보여준다는 분석임.
 - 2·29 합의 파기 등 북한의 계속되는 약속 위반으로 "대화론자 씨가 말



- 랐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태
-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진보센터(CAP) 주최 행사에서 "지금 북한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영화는 예전에도 봤다는 내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런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평가절하했음.
 - 이런 미국 내 분위기 때문에 랩슨 과장의 대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앞서 랩슨은 북미 뉴욕채널의 미국 측 접촉 채널이었던 하트 기사를 대신해 장일훈 신임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와도 최근 상견례차 접촉했음.
 - 한편, 22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중 전략대화에 우리 측에서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키로 했음.
 - 중국에서도 6자회담 차석대표인 쉬부 한반도사무 특별부대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이번 전략 대화에서 3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급 인사와 학자들간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6자회담 재개 성공·실패 가능성 엇비슷">(7/2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특별대사는 19일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이 성공과 실패 사이에서 이슬이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로그비노프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회담한 뒤 서울 주재 자국 이타르타스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전망을 중점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로그비노프 대사는 특히 "6자회담 재개 전망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며 "이와 관련 현재 이슬이슬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며 어떤 방향으로 사태가 진전될지는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요인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 6자회담 재개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엇비슷한 상황이며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관련국들의 향후 행보에 좌우될 것이란 지적임.
 - 로그비노프 대사는 그러면서도 러시아와 한국 모두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 로그비노프 대사는 6자회담 재개 조건 문제와 관련 "이는 아주 멀고 쉽지 않은 길"이라고 지적하면서 "격한 성명과 정치적 결정 등을 쏟아낸 북한 주변의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몇 달간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던 북한의 의도와 행동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됐음.
 - 그럼에도 러시아는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등의 목적에 기초한 정치·외교적 해결 방안



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는 논의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

- 그는 또 "우리는 항상 토론과 대화에 열린 자세지만 한·미 양국의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와의 협의·공조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음.
- 이어 헤이글 장관은 최근 연방정부 자동 지출삭감, 시퀘스터(sequester)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에 대해 "어려운 예산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안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과 동맹의 이익을 방어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장담했음.
- 헤이글 장관은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동맹을 더 공고화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특히 한국전 이후 63년간 한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훌륭한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음.
- 그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대해 "불행하게도 그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가를 대신해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음.

● <미국 "유엔, 북한 선박 조사 절차 착수">(7/1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국적의 선박에 실려 있던 미사일 부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엔 안보리의 내부 절차가 있다"면서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음.
- 하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진행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유엔에는 제재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북한제재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런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 선박의 하역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선박에 무엇이 실려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실려 있는 화물이 유엔 제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유엔 절차를 통해 제재 이행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서 나가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음.
- 이어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 선박의 출발지로 알려진 쿠버와도 곧 이 문



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우리는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이 선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쿠바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곧 쿠바 측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다만 이 문제가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던 쿠바와 이민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일리애나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 북한 선박에서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더 시스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쿠바가 연루돼 있다면서 이민 협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미 의회 "북-쿠바 협력에 강력 대응해야">(7/1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를 운송하다 파나마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샤프트(Steve Chabot) 위원장은 18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무기를 운송하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문제를 거론했음.
- 샤프트 위원장은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시도에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샤프트 위원장은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협조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제재이행법안(H.R.1771)을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날 함께 토론회에 나선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하원의원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를 비롯한 북한 지도자 모두 북한 주민의 처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버드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위기 고조, 그리고 대화와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대북 협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자신도 공동발의자로 나선 '북한제재이행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미국 상원의 로버트 매넨데즈 외교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쿠바가 북한에 무기를 수송하는 것은 국제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운송은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 제재 규정도 위반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 앞서 쿠바 출신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북한과 쿠바, 두 불량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두 정권은 국제의무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규탄했음.
-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고 대북 무기거래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였음.

● <미국 "북한 대비 요격미사일 추가 증강 검토">(7/18, 연합뉴스)

-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 도발에 대비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추가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밀러 차관은 이날 미국방산협회(NDIA) 등이 의회 의사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보다 우월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미사일방어(MD) 정책을 변경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HI)을 30기에서 44기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음.
- 이는 지난 3월 척 헤이글 장관이 오는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 등에 요격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것임.
- 밀러 차관은 특히 "의회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질 것에 대비해 44기 이상으로 요격 미사일을 추가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아직 44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추가 증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 북한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TRY-2레이더)을 일본에 배치하는 계획도 당초 발표한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 이어 밀러 차관은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우리의 미사일방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을 위협에 몰아넣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추가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동시에 북한 핵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도 이날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의 청문회에 출석, 요격미사일 증강 계획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미국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최대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44기 이상으로 늘릴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北, '반미투쟁 역사' 선전...평화체제 필요성 강조>(7/19, 연합뉴스)

-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7월27일)을 앞두고 '반미투쟁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4면에서 푸에블로호 사건, 미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미군 정찰헬기 격추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전후 60년 동안 벌어진 반미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역사가 빛나고 있다"고 선전했음.
- 노동신문은 1968년 1월 벌어진 미군 정찰선 푸에블로호 나포는 "정정당



- 당한 자주권 행사였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며 "조미 대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하나의 커다란 승리였다"고 자평했음.
- 신문은 또 푸에블로호 사건 이듬해인 1969년 벌어진 EC-121 격추 사건을 언급하며 김일성 주석이 격추를 지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행기로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미국이 보복하겠다고 떠벌렸지만 그것은 궁지에 빠진 적들의 발악에 불과했다"며 "대형 간첩 비행기 EC-121 사건으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던 미제는 우리 인민 앞에 끝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1977년 미군 정찰헬기 격추 사건을 거론한 기사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비명을 울렸다가나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미국의 잘못이 빨리 보도돼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던 미제의 시도가 파탄됐다"고 선전했음.
 - 그러면서 신문은 6면에 실린 '평화체제 수립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도적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초미의 과제'라고 주장
 - 신문은 정전협정 백지화의 책임이 미국과 한국에 있다며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바이든 "북한, 진정한 협상 준비돼야 대화 가능">(7/19,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야 북미 대화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진정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그는 "위기를 조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반복된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에도 그들은 필요한 것을 얻으면 또다시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핵개발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음.
 - 이어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선택은 명확하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의무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면 어느 나라와도 대화할 수 있고, 버마(미얀마)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안정의 위협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과 긴밀하게 공조할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중국 연지-평양 관광 전세기 21일 운항 재개>(7/19, 연합뉴스)
 - 중국 지린성 연벤(延邊)조선족자치주 연지(延吉)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21일 운항을 재개한다고 연변일보가 19일 보도했음.
 - 지난해 7월 정식 개통해 10월까지 3개월가량 운항한 연지~평양 전세기 노선은 올해부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일시 중단되면서 운항 재개 시기가 미뤄졌음.
 - 연지-평양 전세기 관광상품은 평양 시내 관광 이외에도 금강산과 묘향산 등지를 둘러봄.
 - 북한 고려항공은 이 노선에 73석짜리 여객기를 투입해 이달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왕복 25차례 운항할 계획임.
 - 연벤의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는 연지-평양 전세기 관광코스에 기존의 금강산 관광에 이어 묘향산 관광을 새로 추가했다"면서 "오는 21일 출발하는 올해 첫 번째 관광단은 헤이룽장성과 텐진(天津)직할시, 연벤 현지 관광객 위주로 구성됐다"고 말했음.
 -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관광객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난 4월 초부터 1개월 이상 북한 관광을 중단했던 연벤, 단둥(丹東) 등 접경지역 중국 여행사들은 지난달부터 부분적으로 관광객 모집을 재개했지만 신청자가 지난해 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라. 일·북 관계

- <일본 납치 담당상, 남북 피해자 논의차 베트남 방문>(7/17, 미국의소리)
 - 일본의 후루야 게이치 납치문제 담당상이 오는 28일 베트남을 방문해 남북 피해자 문제를 논의할 계획임.
 - 일본 언론들은 후루야 담당상이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는 베트남 고위 관리들을 만나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보도했음.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쓸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 만큼 납치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후루야 납치 담당상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몽골을 방문해 차히야 엘베크도르지 몽골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음.
 -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는 몽골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몽골은 지난 해 11월 열린 일본과 북한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회담 장소를 제공한 바 있음.
 - 한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후루야 담당상의 몽골과 베트남 방문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북한 수교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대북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북·러 공동선언 13주년…北신문 "친선협력 강화해야">(7/19,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북·러 공동선언 13주년을 맞아 양국 간 친선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신문은 이날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추동한 역사적 계기'라는 제목의 '기념논설'에서 북·러 공동선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사변"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국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협조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개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음.
 - 신문은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고 세계의 다극화와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우주의 군사화를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전통적인 조로 친선협조 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바. 기 타

- <북한·쿠바, '무기수리↔식량' 물물거래 가능성>(7/18, 연합뉴스)
 -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되면서 북한이 무기수리와 식량 교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물물 거래'를 찾아낸 것이라는 등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불법 거래 전문가인 휴 그리피스는 17일(현지시간)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무기를 수리해주고 그 보상으로 기본적인 식량을 받는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그리피스는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화물함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정교한 미사일 장치들은 설탕에 가려진 채로 컨테이너 속에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임.
 - 그는 "북한은 이름 있는 선박회사의 컨테이너에 무기를 숨겨 이송하는 데 능하다"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불투명한 국가고, 물물 거래는 아무런 금융 기록을 남기지 않아 정확한 거래 규모를 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그리피스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를 막으려면 "유엔 국가들 사이에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또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래를 보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얼마나 절절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우리에게는 우스워 보이는 거래도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 비영리 감시단체인 '핵무기 통제에 관한 위스콘신 프로젝트(WPNAC)'의 메슈 갓세이는 "(이번에 적발된) 청천강호가 이전에도 인공위성 응답기를 꺼놓는 등 감시를 피해 항해를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이번 사태가 최근 조성된 미국과 쿠바 간 '해빙 무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미국과 쿠바는 50년 이상 중단된 양국의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을 지난 6월 가진 데 이어 쿠바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를 논의하는 이민협상도 재개했음.
 - 전문가들은 "쿠바가 은밀한 무기거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쿠바의 '데탕트(detante · 긴장완화)' 움직임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보도했음.
 -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대사는 "쿠바가 북한에 무기를 보내고 나서 돌려받고자 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야 했다"며 "유엔은 쿠바로부터 그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무기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도 아니고, 양국의 긴장 관계 역시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쿠바의 무기들은 낡아 계속 수리해야 하고, 일부 부품은 구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임.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이크 엘먼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 등이 미국의 눈치를 본 나머지 쿠바에 최신식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쿠바가 할 수 있는 건 구형 무기를 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 엘먼은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미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는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여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유엔, 미사일 부품 선적 북한선박 긴급 현장조사>(7/19, 연합뉴스)
- 유엔은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전문가 패널 구성원들이 조만간 파나마 현지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을 빚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이번 현장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의 얘기가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



- 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조사단은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두 8개국에서 파견한 8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도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조사단은 파나마 정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관련 정보 등을 사전 분석한 뒤 내달 5일께 파나마에 도착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등은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면서 이는 국제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 만큼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곧 출항시키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이번 현장조사가 끝나는 즉시 북한 선박 문제가 유엔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미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7월부터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국 정부, 미국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제안>(7/18, 월스트리트저널)
 -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의했다고 17일(수) 국방부가 밝혔다.
 - 기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12월부터 전시에 한국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음.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전작권을 넘겨받았음.
 - 양국이 이번 연기에 합의를 본다면 전작권 전환이 두 번째로 연기되는 것임. 2010년 10월 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바 있음. 북한은 이 침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음.
 - 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미국의 한국군 통제는 한반도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음.
 - 한국 정부 관리들과 일부 전 주한 미군 사령관들은 통솔 구조를 변화시킬 경우 북한의 지속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전쟁억제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음.

- 한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은 올해 2월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경고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악화됐음.
- 미국은 한국에 병력 2만 8,500명을 보유하고 있음. 미군 4성 장군인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라고 불리는 기구를 이끔. 이 사령부는 유사시 양국 군대를 통솔.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임.
- 이 연합 기구는 평시에는 현역 복무 중인 60만 명 이상의 양국 병사들을 통솔함. 전쟁이 일어나면 35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예비군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미군이 사령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임.
- 지난 3월 실시한 연례 합동군사훈련에서는 최초로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군과 미군을 통솔한바 있는데,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단계였음.
- 국방부는 현재의 준비 과정은 아직 2010년에 세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음.
-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음.
- 올해 한국은 지난 4월 미군으로부터 공격헬기를 매입하는 등 독립적으로 무기고를 강화했음. 한국은 전투기 업그레이드도 계획 중이나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임.
- 주한 미군 대변인은 답변 요청을 거절하며 환수 지연에 대한 결정은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 24~25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2차 협의>(7/18,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고위급 협의를 24~2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8일 밝혔음.
-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 측은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함.
- 양국은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의에서 제시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됨.
- 1차 협의에서 양국은 분담금 규모와 분담금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음.
- 이 과정에서 미측은 국방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한국 측이 주둔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의 재정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왔음.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마감됨.

● <미국 "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추진...일부 차질">(7/19, 연합뉴스)

-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 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 이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 견해
-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통제 시스템, 정보감사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임.
- 그는 그러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또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도발적 언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최근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윈펠드 부의장은 이 선박의 미사일 부품 운송목적에 대한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면서 "정보기관들의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그는 "어떤 경우든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적발해 전세계에 북한의 반복적 행위를 다시한번 폭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뎀프시 의장과 윈펠드 부의장을 재지명했다. 미국 합참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임.



- **〈정부, 美측에 내년 방위비 '8천695억원+ α ' 제시〉(7/21, 연합뉴스)**
 -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1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SMA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여기에는 내년 방위비 총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차 협의 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8차 SMA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 지원한 현황을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는 방위비 분담금,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비용과 함께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이 적지 않다는 논리를 들면서 '8천695억원+알파(α)'를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8천695억원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로 구성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알파에는 물가상승률, 미측의 수요 증감요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소식통은 "우리 정부는 항목별로 엄밀하게 따져본다는 입장"이라면서 "물가 상승률과 같은 기본적인 인상요인 외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만약 다른 요인은 배제하고 지난해 물가상승률(2.2%)만 '플러스 알파'로 고려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8천 886억 원 가량이 됨.
 - 정부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하지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면 2018년까지는 내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적용해 분담금이 정해지게 됨.
 - 미국은 우리 정부안에 대해 항목별로 자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4~2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세부 입장과 함께 자국 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협의에서도 양국간 입장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매달 한 차례 정도 고위급 협의를 진행,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임.

- **〈오바마,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7/2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함.



-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20일(현지시간) "오는 27일 한국전 참전기념비 공원에서 열리는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06년 열린 정전 53주년 기념식에 덩 체니 당시 부통령이 참석한 적은 있으나 현직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기념식에는 또 행사를 주최하는 국방부의 척 헤이글 장관과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 샐리 주얼 내무장관 등 장관 3명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연방 상하원 의원,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 우리측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특사단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백선엽 육군협회장, 권태오 육군 중장 등이 참석할 예정임.
- 미국 정부는 이번 행사가 여름철 야외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냉각 안개가 분사되는 대형 텐트 3대를 설치하는 등 기념식 행사에만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 대통령 일정은 1~2일 전에 최종 확정되는 게 관례"라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신 참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전 정전 60주년과 동맹 60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식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음.

나. 한·중 관계

- <中,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 체포' 공식 확인>(7/18, 미국의소리)
 -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다시 탈북한 김광호씨 가족을 체포해 조사 중인 사실을 공식 확인했음.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인 김씨 가족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선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한국 정부 당국자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김광호씨 가족의 재탈북과 중국에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라 중국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씨는 부인과 딸, 그리고 처남과 처제와 함께 지난 달 말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 연변지역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당국은 그러나 이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이 그동안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왔기 때문에 김 씨 가족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김 씨 가족의 억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두 나라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 씨 부부와 딸이 지난 2009년 탈북해 한국에서



-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 오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 또 이들을 북한에 송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고 영사 면담도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은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국적이 없는 김 씨의 처제와 처남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의 재탈북 사실을 처음 공개했던 탈북난민인권연합회 김용화 회장은 이전과는 달리 중국 측이 체포 사실을 확인해 줬다는 점에서 한국 측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하지만 중국이 조사를 이유로 영사 면담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 중국이 체포 사실을 북한에도 알렸을 가능성이 크고 북한 측도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지난 해 3월 중국에서 체포돼 7월 석방된 한국의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의 경우 구금 29일만에야 첫 영사 면담이 이뤄진바 있음.
 - 김 씨 부부는 첫 탈북 때 3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지난 해 말 북한으로 돌아가 지난 1월 평양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음.

다. 한·일 관계

-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무관 파견, 韓 배려한 결과">(2/19, 연합뉴스)
 - 중국이 우리 측에 재탈북자로 알려진 김광호씨 가족 일행 5명을 체포해 조사중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음.
 - 김씨 가족 일행의 중국 억류가 공식화됨에 따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한 본격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정부 고위소식통은 18일 "중국이 김씨 가족 일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지난 12일 김씨 가족 일행이 중국 옌벤 지역에서 체포됐다는 주장이 탈북단체에서 제기된 이후 중국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음.
 -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 중국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조사 중인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조사 혐의 등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 가족 일행도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김씨 가족 일행의 복송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갖고 접근하고 있음.
 - 정부는 우선 5명 중 한국 국적을 가진 김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사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 처제·처남 등 2명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이 일단 체포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중국이 조사를 이유로 영사면담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등 협조가 생각보다 지연되거나 한국 국적 보유 여부에 따라 일행 5명을 선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체포돼 7월 석방된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의 경우도 구금 29일 만에야 첫 영사면담이 이뤄졌음.
 - 중국은 우리측에 체포 사실을 통보하면서 북한에도 같은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추정. 최근 라오스 탈북청소년 사례처럼 북한도 중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송환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불법입국 혐의로 김씨 가족 일행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기소를 통해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것임.
 - 앞서 한 탈북단체 관계자는 지난 12일 재입북자인 김씨 부부와 딸, 김씨 처제·처남 등 5명이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음.
 - 2009년부터 3년간량 한국에 거주했던 김씨 부부는 지난해 말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이들은 올 1월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측을 비난하기도 했음.
- <외교차관 "높은데서 멀리보는 자세로 한일문제 풀자">(7/18, 연합뉴스)
-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 관계 개선 방안과 북한 핵문제 해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새로 지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개관식에 참석키 위해 일본을 찾은 김 차관은 이날 오전 도쿄의 외무성 청사에서 기시다 외무상과 면담했음.
 - 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동북아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자 단추이며, 양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일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높은 곳에 앉아 멀리보는 '登高望遠(登高望遠)'의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한일관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을 것임.
 - 그는 또 "기회가 되는대로 자주 만나서 서로의 문제를 공동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고자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덕담했음.
 -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들어 한일간에 외무장관 회담과 외교차관간 협의가 잇달아 이뤄진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그는 이어 "일본과 한국은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웃국가"라며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잘 해가면서 양국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 좋겠다"고 부연했음.



- 김 차관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를 건설적으로 풀어가는 방안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큰 그림 하에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소개했음.
-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카운터파트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협의를 가질 예정. 앞서 두 차관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회동했음.

라. 미·중 관계

● <시진핑, 美국무장관 회견"태평양은 두 대국 수용하기 충분해">(7/15, 인민일보)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13일 인민대회당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회견하였음.
- 시진핑 주석은 중미 양국은 고위층 간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본인은 오바마 대통령과 대화와 교류하길 원한다며, 양측은 중미 전략 경제대화 및 인문 교류와 같은 고위층 협상 기제를 이어나감은 물론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 주석은 중미 간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윈윈에 있다며, 양국은 협력의 핵심점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공동된 이익점을 탄탄히 해야 한다고 지적. 아울러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해결해 경제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미 양국은 일부 문제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미 간 3개 연합공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측의 핵심 이익을 존중함은 물론 상대국가가 선택한 발전의 길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하여 관련 이견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진핑 주석은 드넓은 태평양 양안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대국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며,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함께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존 케리 국무장관은 세계는 현재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폭넓은 시각과 장기적 안목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수립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요구사항에 근거해 고위층 간 교류는 물론 대화와 상호신뢰, 상호협력을 강화해 여러 가지 도전에 공동 대응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 케리 장관은 또한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 간 새로운 대국 관계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기 희망한다고 전했다.

● <미국 하원, 연방기관 중국산 IT 구매 금지법 발의>(7/15,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을 우려해 연방 기관의 중국



- 산 정보기술(IT)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
-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IT 업계도 정치·경제 측면에서 모두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프랭크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최근 발의한 2014회계연도 예산법 개정안에 IT 납품 업체들이 미국 연방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상품을 대려면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음.
 - 미국 의회는 지난해에도 2013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슷한 규제 조항을 포함했었음.
 - 상무부나 법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이 중국 정부가 소유·운영·지원하는 기업이 생산·제조·조립한 IT 제품을 사들이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했으나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음.
 - 중국 정부는 작년에도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이 "인터넷 안전을 핑계로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며 양국 간 신뢰는 물론 경제·무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 IT 업계는 현실적인 해외 부품 조달 체계나 중국과의 무역 장벽 갈등 우려 등을 고려하면 울프 의원이 발의한 조항은 개정 또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울프 의원은 그러나 최근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중국의 '사이버 해적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는 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시진핑에 '지금도 북한비핵화 마지막 기회'”(7/1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번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고 NHK가 미국과 일본 외교 관계자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음.
 - NHK에 따르면 당시 회담때 시 주석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북한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상당히 진행돼 있어 이번이 비핵화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 이미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핵무기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할 때까지 방치할 경우 인정하기 싫어도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게 된다는 경고였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으로는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모든 핵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먼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양국이 보조를 맞춰 강한 자세



- 로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했다고 NHK는 전했다.
- 아울러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 측 소행으로 의심하는 사이버 공격 문제와 관련, "중국도 피해자"라며 "사이버 공간은 어둠 속 같아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했다고 NHK는 전했다.

● <중-미 신형 대국 관계 구축 실현 난망>(7/19, 연합뉴스)

- 중국이 제안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은 미국의 사실상 거부로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음.
- 신형 대국 관계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2년 2월 15일 부주석 신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처음 공식화한 개념으로 중국과 미국이 제로섬 사고방식을 버리고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지는 외교 정책임.
-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연합조보는 18일 논평에서 미국은 신형 대국 관계와 관련, 이는 실현이 어려우며 따라서 중국은 이 제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 미국은 중국이 이 제안을 통해 갈등을 외면하고 협력만을 추구하면서 양국 간 충돌 현안을 회피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관측임.
-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마중 전략경제대회의 성과를 강조하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 회담에 불참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미국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중국 퍼스트 레이디 펑리위안 여사와의 만남을 거부한 데 이어 미국 외교 사령탑 케리 장관이 부인의 병을 핑계로 미-중간 중대한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신형 대국 관계 구축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분석임.
- 윌리엄 번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 회담에서 대국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 규범 준수와 자제를 제시했음.
- 이어 인권의 보편성, 해킹 문제, 지적 재산권,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해 등이 거론됐음. 모두 중국이 수용하기 힘들고 회피하려는 문제들임.
- 중국은 중-미 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 소리 높이고 있지만 미국은 그 같은 중국 장단을 맞출 준비가 안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신문은 갈파했음.
-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중국과 미국이 이익을 공유하는 밀접한 관계가 됐다면서 상호 존중아래 새로운 대국 관계 구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마. 미·일 관계

● <TPP 18차 회의 개막...일본 23일부터 참가할 듯>(7/15, 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내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 협정(TPP) 18차 회의가 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막됐음.
- 이 회의는 투자, 지적재산권, 시장 접근 등 분야별로 나눠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 일본은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끝난 뒤인 23일 오후부터 회의에 참가할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쓰루오카 고지 수석 교섭관 등 100명 규모의 대표단을 말레이시아에 보낼 예정임.
 - 미국 등 기존 참가국 11개국은 연내 교섭 타결을 목표로 내걸고 있음. 지난 5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17차 회의에서는 검역,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시장 접근과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각국의 이해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어서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18차 회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기존 참가국들이 일본을 상대로 교섭 현황을 설명하는 특별 회의가 열림.
 - 일본은 이 회의에서 쌀과 보리, 소고기 등의 5개 품목은 관세 철폐의 예외 항목으로 놔둬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임.

바. 미·러 관계

- <美, 오바마 방러 저울질?…백악관, 내심 안 밝혀>(7/18, 연합뉴스)
 - 미국 첩보감시망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거취 문제가 미·러 관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고 있음.
 -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로 향할 계획"이라면서 "방문 일정과 관련해 추가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 이는 스노든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거진 오바마 러시아 방문 계획 취소 가능성을 형식적으로는 재차 부인한 것임.
 - 앞서 지난주에는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9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 준비에 바쁘다. 이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음.
 - 애초 계획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9월 5~6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같은 달 3~4일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 그러나 스노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견해는 계속 나오고 있음.
 - 카니 대변인은 오바마의 모스크바 방문 일정과 관련해 "새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입장 표명을 꺼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더 전할 말이 없다"면서 대답을 회피했음.
 - 그는 다만 "우리도 푸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면서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 모스크바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체류 중인 스노든은 러시아에 임시망명을 공식 신청한 상태임.
- 이에 미국 정부는 즉각 러시아 정부에 스노든의 송환을 다시 요청했음.

사. 중·일 관계

● <아베, 센카쿠근처 섬 방문...선거앞두고 對中시위>(7/17,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나흘 앞둔 17일 중국과의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근처 낙도들을 방문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선거유세차 오키나와(沖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이날 센카쿠에서 남쪽으로 약 150~170km 떨어진 이시가키(石垣)섬으로 이동, 현지의 해상보안부를 시찰했음.
- 일본은 행정구획상 센카쿠 열도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市)에 편입해 놓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을 경비하는 현지 해상보안부 대원들을 격려하며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을 단호하게 지켜 내겠다"고 결의를 피력했음.
- 아베 총리는 이어 현지에 정박한 순시선에 승선, 현황보고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 국유화 이후 중국 정부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 자주 접근, 영해 경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음.
- 그는 또 이시가키 시내에서 행한 가두 연설에서 "센카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영토 문제는 없다"며 "우리는 (중국에) 한 걸음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아베 총리는 오후에 미야코섬으로 이동, 현지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대원들을 격려. 일본 현직 총리가 미야코섬을 방문한 것은 1972년 미국으로부터 오키나와를 반환받은 이후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아베 총리가 선거를 앞두고 센카쿠 인근 지역의 경비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중국에 맞서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임.
- 그는 또 이시가키 시내에서 행한 가두 연설에서 "센카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에 영토 문제는 없다"며 "우리는 (중국에) 한 걸음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일본 방위상, 자위대 선제공격능력 구상 밝혀>(WSJ)<(7/17, 연합뉴스)>

- 일본이 자위대에 선제공격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에 선제공격능력을 주는 것을 비롯해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정부가 장기



- 국방 지침 변화를 구상 중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 다른 국가가 일본에 미사일을 쏘면 우선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용하지만, 공격이 계속되고 상황이 절박하면 반격이 당연하다는 게 오노데라 방위상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동맹국, 특히 미국에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양국의 역할 분담을 검토한 결과 우리를 공격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 우리가 적의 전략기지를 타격하는 제한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WSJ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것이 일본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발언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를 확보하는 것과 유사 시 자기 방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반격까지 하는 것이 현재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헌법은 전쟁, 무력위협,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군대·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사실상의 군대를 자위대라고 부르고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음.
 - 신문은 오노데라 방위상이 자위대 내에 미국의 해병대와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게 잠재적인 개선안이라고 밝혔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음.
 - 그는 중국에 관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의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음.
 - 올해 초 중국 군함이 일본 구축함을 상대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영토선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나 무력 사용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중국, 아베 센카쿠 인근 섬 방문에 강력 반발>(7/18,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센카쿠(중국어명: 다오위다오) 열도 인근 섬 방문에 반발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우리는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중국 영토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아베 총리가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강조하면서 중국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말했다.
 - 화 대변인은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해 논란이 없지가 없는 주권을 갖는다"며 "중국 정부는 계속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다오위다오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나흘 앞둔 17일 센카쿠 열도 인근 섬인 이시카기섬과 미야코섬을 잇따라 방문했음.
 - 한편, 중국 언론은 아베 총리의 센카쿠 인근 섬 방문을 주요 뉴스로 보



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신정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은 아베 총리의 행보를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음.

-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관영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아베가 일본을 갈수록 '건달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아베 총리를 강력히 비난했음.
- 환구시보는 "아베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다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또 했다"며 "일본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또 한 번의 허튼소리로 중일관계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성토했음.

아. 중·러 관계

● <러시아, 극동 지역서 또 대규모 군사훈련>(7/15, 연합뉴스)

- 러시아군이 극동 지역에서 중국과의 연합 해상 훈련에 뒤이은 대규모 자체 군사훈련에 돌입했음.
- 이타르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군 동부군관구가 하루 전부터 비정기 군사훈련을 개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태평양함대 소속 6개 분함대가 오희츠크해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국방부 공보실은 태평양함대 소속 함정들이 미사일방어(MD) 훈련, 대함·대어뢰 훈련, 교신 및 공조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공보실은 또 함정들이 대함 전투기 투폴레프(Tu)-142, 일류신(IL)-38 등의 지원을 받아 잠수함 수색 훈련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소개했음.
- 훈련에는 미사일 순양함 '바라크,' 구축함 '마르샤 샤프슈니코프'와 '아드미랄 비노그라도프,' 대형 상륙함 '아슬라바,' '니콜라이 빌코프,' 어뢰정, 지원함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음.
- 공보실은 해상 훈련과 함께 내륙 지역인 자바이칼주, 부랴티야 공화국 등에서도 기갑부대, 공병대 등의 이동 배치 훈련이 실시됐다고 소개했음.
- 크렘린궁에 따르면 아무르 지역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Tu-95MS '베어(Bear)'도 훈련 기간 전면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음.
- 국방부도 "러시아 대통령의 명령으로 제6952 장거리 비행기지가 모스크바 시간 오후 5시부터 전면 전투준비 태세로 전환했으며 Tu-95MS 전략폭격기도 전투 임무 출격에 대비 중"이라고 확인했음.
- 이번 비정기 훈련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투력 점검 차원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전격적으로 지시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20일까지 1주일 동안 계속될 훈련에는 동부군관구 산하 16만 명의 병력과 약 1천대의 탱크 및 장갑차, 130여 대의 전투기 및 헬기, 70여 척의 함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 동부군관구는 지난 2010년 시베리아 군관구와 극동군관구가 통폐합해 창설됐음. 지난 3월 말에는 러시아 남부 지역 군부대 및 흑해 함대가 역시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대규모 비정기 군사훈련을 했음.



- 러시아는 앞서 지난 5~11일 중국과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포트르대제만과 동해상에서 약 20척의 양국 군함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음.

자. 일·러 관계

● <일·러 전직외교관, 쿠릴열도 2개섬 경제특구화 제안>(7/19,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의 전직 외교관이 두 나라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의 해법으로 경제특구 구상에 기초한 이른바 '2+2' 방안을 제안했음.
- 19일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대(對) 러시아 협상 경력을 가진 도고 가즈히코 전 일본 외무성 유럽국장장과 주일대사를 지낸 알렉산드르 파노프 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전날 러시아 매체에 실은 글에서 쿠릴 4개섬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음.
- 이들의 제안은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 중 하보마이, 시코탄 등 2개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 전제로 시기와 조건을 협상하는 한편,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의 영유권 논쟁을 당분간 보류한 채 양측 모두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구로 삼는다는 내용임.
- 양측간 경제특구 방안은 과거에도 부상한 적이 있음. 199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때 보리스 옐친(2007년 사망)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2000년 사망) 당시 총리에게 '당분간 4개섬 전체를 특구로 만들어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음.
- 이번 제안은 옐친 전 대통령의 방안을 참고하되, 하보마이와 시코탄 등 2개섬을 일본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하지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임.
-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쿠릴 4개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을 겪어왔음.
-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 조약을 근거로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반면, 현재 쿠릴 4개섬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 대전 종전 이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1956년 10월 양측은 쿠릴 4개섬 중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평화조약 체결후에 일본에 반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4개섬 일괄 반환을 주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재임시절(2001~2006년)부터 양측 간의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음.
- 그러던 중 일본과 러시아는 지난 4월말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때 쿠릴 4개섬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해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